경찰청 설명자료

보도시점 즉시용

경찰청은 집회금지 통고 감소가 불법·무질서한 집회시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<보도 내용 (문화일보, '26. 1. 28.)>
◇ 李정부 들어 '집회금지 통고' 반토막... 도심 '시위대란' 우려

1. 주요 보도 내용

○ 이재명 정부 출범 후 **경찰의**

집회 금지·제한통고가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, 정년 연장과 AI 도입, 정치 갈등 격화 등 **시위 증가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**이어서 우려되는데, **경찰이 집회·시위 대응 인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논란 예상** 보도

2. 설명 내용

○ '25년 집회·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건수[420건]가 전년[1,001건] 대비 감소한 이유는 **'24년 대통령 관저·법원 등을 상대로 하고, 집시법상 금지통고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·시위 등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결과입니다.**

○ 집시법상 **'집단적인 폭행, 협박, 손괴,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·시위'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집회 금지 통고**를 할 수 있는 만큼, **집회금지 통고 감소가 불법·무질서한 집회시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**

– 오히려, **집회금지 통고 감소는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집회의 감소와 더불어, 시민들의 성숙된 집회·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**할 수 있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	책임자	과장 양 승 호 (02-3150-2083)
		담당자	계장 김 세 준 (02-3150-145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